

민선8기 전북도정, 창업·벤처 활성화 정책 공식 발표

창업벤처 생태계 조성 '속도'

1조 투자펀드·스타트업타운 조성 등 20대 과제 추진
2026년까지 기업가치 1000억원 이상 예비유니콘 배출

전북도는 7일 전북테크노센터에서 열린 '2023 전라북도 창업정책 한 마당' 행사에서 지역창업 활성화를 위한 민선 8기 창업·벤처 활성화 정책을 공식 발표했다.

민선8기 전북도는 1조원 규모의 투자펀드 조성을 비롯해 스타트업타운 조성 등 지역 창업 활성화를 위한 공격적인 정책을 추진한다.

1조원 규모의 창업펀드와 스타트업타운 조성을 비롯해 지역 내의 거버넌스와 네트워크를 구축해 투자연계로 이어지는 전 주기적 창업지원으로 '지속성장 가능한 역동적 창업·벤처 생태계 조성'에 나서겠다는 구상이다.

이번 정책은 기술창업기업이 과거보다 점차 늘고 있으며, 하드웨어적 지원보다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소프트웨어적 지원이 필요함에 따라 '지역창업 생태계 구축'이라는 분석 하에 내놓은 정책이라고 밝혔다.

전북도가 가진 강점과 약점을 파악하고 기회와 위협요소 검토를 통해 지속성장 가능한 역동적 창업·벤처 생태계 조성이라는 비전 아래, 5대 추진전략과 20대 핵심과제를 추진할 방침이다.

5대 추진전략으로 △거버넌스 활성화, △투자 네트워크 고도화, △클러스터 기반화, △성장 주기별 지원 체계화, △지역펀드 규모화를

내세웠다. 20대 핵심과제로는 스타트업타운 조성, 창업 통합정보 플랫폼 운영, 유망 스타트업 집중관리, 해외 스타트업 유치, 대규모 펀드 조성 등을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전북도는 이를 통해 2026년까지 기업가치 1,000억원 이상의 예비유니콘 10개사를 배출하겠다고 목표를 밝혔다.

이는 대부분 신규사업으로 민선 8기 들어 팀으로 있던 창업지원조직을 과 단위로 확대하고 공격적이고 역동적으로 창업정책을 추진하고자 하는 전북도의 강한 의지를 엿볼 수 있는 대목이다.

도가 발표한 5대 추진전략의 주요 사업내용은 다음과 같다.

▲창업·벤처 거버넌스 활성화 창업전담기관인 전북창조경제혁신센터가 지역의 창업혁신 허브기관으로 자리잡고 창업기업의 성장과 함께 커갈 수 있도록 기능을 강화해 나간다.

지역의 창업 지원기관이 함께하는 전북창업기관협의회를 26개 기관에서 30개 기관으로 거버넌스를 확대해 공동 협력사업을 발굴하고, 중앙부처 공모사업 공동 대응 등 시너지 효과를 높여 나갈 계획이다.

또한 창업기업들의 편의 제공을 위해 각 기관의 다양한 사업을 한 곳에

서 한번에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전라북도 창업정보 온라인 서비스(https://www.tbc.or.kr)'를 공동으로 운영한다.

▲네트워킹 고도화 공공주도에서 민간주도로의 정부의 창업정책 변화에 적기 대응하는 한편, 유망기업의 기업성장을 위해 도내·외 유관기관과 소통·협력을 강화함으로써 지역 창업생태계 저변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지역 내 민간투자사가 거의 없어 원활한 투자금 유치가 어려운 지역 스타트업 환경을 개선하고자, 수도권 투자들과도 미팅할 수 있는 연결고리를 마련해 투자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합심 계획이다.

이를 위해 지역의 유망 스타트업 '스케일업 100'을 발굴 집중 육성해 나간다. 또한 국내 창업생태계 핵심기관인 스타트업얼라이언스, 디캡, 한국벤처캐피탈협회(KVCA) 등과 전북 창업생태계 강화를 위한 협력을 이끌어 낼 계획이다.

또한, 올해는 300여명의 전국 창업전문가가 참여하는 '2023 스타트업 생태계 컨퍼런스'가 전주에서 개

최되고, 디캡 데모데이' 등 다양한 민간창업·투자 지원기관과의 협력 행사를 유치중에 있다.

또한, 올해부터는 도내 민간투자사와 스타트업 중심의 정보공유 및 소통의 장으로 전북벤처 투자포럼을 매월 셋째주 목요일에 추진중에 있다.

▲클러스터 기반화 전북도는 올해 중기부 공모사업을 통해 그린스타트업 타운을 2026년까지 조성할 계획이다.

낙후된 도심 스타트업과 투자자, 대기업, 대학·연구기관 등이 자유롭게 소통·교류하는 그린스타트업 타운 조성을 통해 경제성장 및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할 계획이다.

또한, 올해 중기부의 TIPS 운영 2곳을 유치해 민간투자사 관점에서 지역 스타트업을 발굴·집중 관리하면서 TIPS 기업으로까지 양성하기 위해 TIPS 스타트업 사업을 추진중에 있으며, 민선8기 4년동안 5개사를 유치할 방침이다. "TIPS: 민간과 정부가 합심해 우수 기술창업기업 육성을 프로그램, 민간투자사가 유망 스타트업을 발굴해 1억원 이상 투자하면 중기부가 R&D 등으로 8억원 지원

더불어, 중기부 K-Startup 그랜드 챌린저 사업과 연계해 우수 아이템을 보유한 해외 스타트업을 유치할

계획이며, 국내 최고의 IT기업 등을 대상으로 거점오피스 공간, 워케이션 장소도 마련하여 지역 창업생태계를 더욱 다변화할 방침이다.

▲성장주기별 체계화 기업의 데스밸리 극복을 위해 창업가의 아이디어 사업화부터 교육, 판로지원, 해외진출까지 예비·초기·특히, 창업중심대학을 중심으로 스케일업할 수 있도록 핀셋 지원하며, KORETOVIET 등 해외거점을 활용해 해외진출을 지원하는 등 한 단계 더 성장을 견인한다. "KORETOVIET: 지난 2021년 전북창조센터가 호치민시 관광청조력센터 내 조성된 전북 스타트업의 베트남 진출 지원사무소(비이더 상단회, 박민희 전서관 운영 등)

이외에도, 담보 부족으로 자금을 꾸는 도내 창업기업에게 최대 9,000만원까지 특례보증을 지원한다. 올해에는 지역 내 30개 창업 지원 기관에서 창업교육, 멘토링, 컨설팅, 사업화 등 103개 사업에 1,284억원을 투입해 기업의 성장 도약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투자펀드 규모화 2026년까지 1조원 규모의 창업펀드를 조성해 투자 생태계 활성화와 기

업성장을 지원한다. 그동안 전북도는 2016년부터 7년동안 총 9개펀드 2,300억원을 조성한 바 있다.

올해부터 오는 2026년까지는 최소 7,600억원을 조성할 계획이며, 올해에만 KDB, 모태펀드 등과 연계해 2,400억원을 조성한다.

지역 주력산업과 신산업 분야의 기술분야 스타트업에 집중해 전북의 유니콘 기업으로 성장시켜 창업생태계 파급효과를 극대화 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철저한 성과분석과 회수금의 체계적 관리를 통해 '투자-회수-재투자' 선순환 구조의 투자생태계를 조성함으로써 제도전과 새로운 투자에 시금석이 될 수 있도록 체계화할 계획이다.

이 외에도 창업기업이 투자를 많이 받을 수 있도록 홍보와 네트워킹 등도 강화해 나간다.

김관영 도지사는 "도내에서 시작한 기업이 성공하려면 기업 유치 못지않게 값질 것이다. 나아가 이 기업들이 전북의 특성을 살려내면 전북 경제 생태계 전반을 발전시킬 수 있다"며 "수소연료전지 분야 벤처기업인 부안의 테라리스크와 같은 제2, 제3의 예비유니콘 기업 육성을 통해 전북경제의 미래를 열겠다"고 강조했다. /김재훈 기자

대통령실 '기금운부 이전 검토 지시, 사실 아니다'

지난 6일 윤석열 대통령의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의 서울 이전 검토 지시 소식에 한바탕 큰 소란이 일어났다.

이전 검토 배경은 지난해 기금운용본부 연간 수익률 손실에 따른 것으로 비춰지고 있다.

이에 대해 대통령실은 "기금운용본부 이전 검토 지시는 사실이 아니며, 윤 대통령이 낮은 수익률에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라 지시했다"고 해명했다.

전세계 통화긴축과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등 여러 경제 여건에 놓인 현 실정에서 비친 지난해 국민연금기금 운용 수익률 -8.22%의 손실은 정책상 논리를 붙이기 보단 뛰어난 재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김영태 기자

진보당 당무위, 전주를 재선거 강성희 후보 지원 총력 의결

진보당은 7일 강성희 선거본부 사무실에서 당무위를 개최하고 4·5 전주를 재선거에 출마한 진보당 강성희 후보의 당선에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고 밝혔다.

모두발언에 나선 진보당 윤희숙 상임대표는 "이번 선거는 윤석열 정부를 심판하는 선거"이며 "낡은 구태 정치를 심판하여 전주의 새로운 미래를 여는 선거"라고 규정했다.

이어 "전주 시민과 함께 진보당 강성희의 당선으로 검찰독재와 철세정치를 심판하고 정치교체를 실현하겠다"고 약속했다.

강성희 예비후보는 "지금 전주는 뜨겁다. 이제 대서는 개혁이다. 진보당이 전주에서 대안역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강성희의 당선은 정치교체를 열망하는 전주시민의 승리이자, 검찰독재 윤석열 정권에 보내는 가장 강력한 경고가 될 것"이라며 "윤석열 정권에 완강하게 맞서고 무너지는 민생을 굳게 지키겠다"고 밝혔다.

진보당은 강성희 예비후보의 지지율이 약진하고 있다고 자체 평가하고 지지세를 이어가 진보당의 첫 원내진출을 실현하고 선명이당·대안정당으로 떠오르겠다는 방침이다. /뉴시스



전북도의회 탄소중립특별위원회는 7일 고공담 세미나실에서 전라북도 2050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와 함께 연석회의를 개최하고 전라북도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양 위원회의 협력과 소통을 다짐했다고 밝혔다. (사진=전북도의회 제공)

"신동진벼 보급종 공급 중단 계획 철회하라"

도의회, 김동구 도의원 대표 발의 건의안 채택

전북도의회가 단순히 다수화 품종이라는 이유로 신동진벼를 단무대에 올린 정부의 탁상공론 불통 정책을 비판하며 "신동진벼의 보급종 공급 중단 계획을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하고 나섰다.

도의회는 7일 제388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김동구 의원(군산·더불어민주당)이 대표 발의한 '신동진벼 공공비축미 매입 제한 및 보급종 공급 중단 계획 철회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정부가 지난해 2024년 신동진벼 공공비축미 매입을 제한하고 2025년에는 정부 보급종 공급을 중단하겠다"고 밝혀 "농민들은 사전에 어떤 논의 과정도 없이 단순히 다수화 품종을 매입 품종에서 제외시키는 방식으로 전체 쌀 생산량을 조절하겠다는 정부의 일방적인 결정에 당혹스러움을 넘어 분개"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정부가 다수화 품종으

로 제시한 '10a당 생산량 570kg 이상 기준'에 대한 뚜렷한 근거도 없으며 정부가 퇴출 근거로 내세운 신동진벼의 10a당 생산량 597kg은 과거 표준 품종으로 내세운 참동진벼의 생산성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신동진벼는 가치와 우수성을 인정받아 국내에서 가장 많이 재배하고 있으며 전라북도는 2022년 기준 벼 재배면적의 53%를 점유"하고 있다.

이에 김 의원은 "정부가 다수화 품종이라는 이유로 신동진벼를 보급종에서 중단하겠다는 것은 졸속에 오류투성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지금 정부 정책은 그동안 쌓

아온 신동진벼의 브랜드 가치와 시간과 노력, 투입된 예산을 모두 무효고 포기하겠다는 것이며 신동진벼 대신 다른 품종을 도입할 경우 농가소득은 크게 감소해 그 손해는 고스란히 농민의 몫으로 남게 된다"고 우려를 표했다.

따라서 김 의원은 "정부는 신동진벼의 공공비축미 매입 제한 및 보급종 공급 중단 계획을 즉각 철회하고 벼 보급종 수매에 대한 시기와 방법을 현장에서 있는 농민과 소통을 통해 재논의 하라"고 촉구했다. 나아가 "쌀값 하락 시장 격리를 시행하지 않은 게 문제임을 직시하고 쌀 시장격리제 의무화를 담보하는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즉각 수용하고 농가소득 보전을 위한 대책을 마련할 것"도 요구했다.

한편 도의회는 오늘 채택한 건의안을 대통령, 국회의원,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등에게 전달해 정부의 신동진벼 보급 중단 계획 철회를 촉구할 방침이다. /김재훈 기자

김건희 추가조작 대장동 50억 클럽 "쌍특검 도입하자"

염영선 도의원 주장

전북도의회 염영선 의원(행정자치위원회, 정읍)이 7일 김건희 추가조작 의혹 및 대장동 50억 클럽 관련 특별검사 도입을 주장해 귀추가 주목된다.

염영선 의원은 "작금의 대한민국 검찰이 국민을 상대로 공정과 상식 원칙이라는 예리한 칼날을 휘두르다가도 대통령의 배우자와 법조계 고위직들 앞에서는 무딘 칼이 되고, 그들에게면 죄부를 주기 위한 무능하고 무기력한 수사로 일관하고 있다"며 비판했다.

구체적으로 추가조작 의혹과 관련하여 김건희라는 이름이 공소장에 200번 이상 등장하고 공판 중 300회 이상 언급됐지만 단 한 번도 소환하지 않았으며, 대장동 50억 클럽과 관련하여 전직 대법관, 전직 검찰총장 등 법조계 고위직에 대한 수사는 미진하고, 객상



도 전 의원의 자녀가 5년을 근무하고 50억 원이라는 막대한 퇴직금을 받았는데 도 이에 대한 뇌물죄 입증에 실패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윤석열 정부의 검찰에 공정하고 엄정한 수사를 기대할 수 없기에 수사와 공소제기 등에 있어 독립적인 지위를 보장받는 특별검사 도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염 의원은 "검찰의 수사를 지켜보는 국민의 분노가 들끓고 있다"며 "쌍특검을 통해 모든 국민이 법 앞에 평등하다는 헌법정신을 구현하고 의혹의 정상을 명백히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재훈 기자

4·5 전주를 재선거 후보자 말·말·말

"교육진흥재단 설립, 글로벌 인재 양성"

임정엽 예비후보 "외국어 교육·해외연수 제공 등 이류"

임정엽 전주시을 국회의원 예비후보가 글로벌 인재 양성의 산실이 될 '전주교육진흥재단'을 설립, 교육도시 전주의 위상을 다시 세우겠다고 공약했다.

임정엽 예비후보는 7일 도 입회회에서 연 기자회견에서 "국회에 입성하면 전주를 '지방소멸 해소 교육도시'로 지정받아 교육을 통해 지방을 살릴 수 있는 모델을 제시하겠다"며, 교육진흥재단 설립 의지를 밝혔다.

새로 설립될 재단은 우리 아이들의 특기, 적성, 잠재력을 조기에 발견해 유럽에서 멋진 꿈을 펼칠 수 있는 글로벌 인재의 산실로 만든다는 구상이다. 구체적으로 △외국인 학생, 교포 출신, 다문화 강사 등 실력있는 전문가

가 대거 참여하는 살아있는 외국어 교육 △최적화된 국내의 대학교수와 연구소 출신 석학들의 재능기부 △다중지능학습센터 운영을 통해 특기적성 파악 후 맞춤형 교육 △원어민이 참여하는 방학 중 K팝트 운영으로 글로벌 체험 학습 △해외연수·유학 정보 제공 등이 이뤄진다.

임 예비후보는 "글로벌 교육을 통해 '인 서울(In Seoul)'에만 매달리던 우리 자녀들의 시선을 '인 유럽(IN EUROPE)'으로 넓혀줄 것"이라며 사실상 재단이 인 유럽을 향한 활주로가 될 것임을 강조했다.

아울러 재단 운영이 분개도에 오르면 교육도시 전주의 명성을 되찾게 될 것이라며 자녀 교육을 위해 전주로 이주하는 인구가 늘고, 사교육비 부담은 크게 줄이는 효과도 얻게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특별취재반